中 코로나 감염자 급감… 상하이 이어 베이징 정상화 수순

차이나 뉴스&리포트

주요도시 방역·통제조치 완화
봉쇄해제에 경제회복 기대감 ⬆
"방역 성과… 최종단계 접어들어"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공원에서 관계자가 입장객들의 체온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도 정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한 달 넘게 도시 전면 봉쇄에 버금가는 통제 끝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확연히 줄면서다.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베이징 전역의 식당들이 문을 열었고, 학교 수업도 재개 일정이 나왔다. 관광지와 공원 등도 개방하고, 대중교통도 정상 운영한다. 일단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의 1차전은 엄격한 통제와 봉쇄를 앞세운 '제로 코로나'가 이긴 셈이다.

6일 베이징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펑타이구와 창핑구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식당 내 식사를 허용키로 했다.

앞서 베이징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식당 내 영업은 전면 금지하고 배달만 허용한 바 있다. 최근 감염자가 발생한 펑타이구 전역과 창핑구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배달만 가능하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13일부터, 유치원은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노동절 연휴 직전인 지난 4월 29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당국 관계자는 전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상황도 지속적으로 개선돼 발병이 전반적으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기존의 엄격한 조치를 고수하고, 가능한 빨리 코로나 제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지와 공원 등도 다시 문을 열고, 대중교통도 정상화됐다. 다만 입장 인원은 정원의 75% 수준으로 제한되며, 모든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역시 기존 48시간 이내 음성 증명서를 요구했던 것에서 완화된 방침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핵심도시들이 정상화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실제 각종 지표도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다.

5월 관방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6으로 4월의 47.4에서 반등했다.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을 뜻하는 기준선 50에는 못 미쳤지만 봉쇄 해제 등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회복 탄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베이징시는 경기 진작을 위해 부양조치도 내놨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자리 보조금도 지급한다. 플랫폼 기업의 홍콩 상장을 적극 지지하며, 전기차로 교체 매매할 경우 보조금 등으로 소비도 살린다는 방침이다. 향후 기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책 발표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과의 1차전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마음을 놓긴 이르다. 재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봉쇄가 반복될 경우 받을 경제적 타격은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상하이시는 지난 1일 도시 봉쇄 완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지역 사회 감염이 13명까지 늘었다.

상하이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에 지역사회 감염이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어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다"며 "재발 위험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한은 "中 생산·물류 정상화, 상당 시일 더 필요"

봉쇄해제에도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제로코로나 인한 하방리스크 지속"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메트로신문DB

중국의 봉쇄조치가 해제된다 해도 생산·물류 등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봉쇄조치 현황 및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초 200명 내외에서 4월 중순 2만명대를 돌파한 이후 최근(6월 1일 기준) 100명대로 하락했다. 상하이가 6월부터 일상 회복단계로 전환되는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봉쇄조치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대응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 및 수출입 등이 위축되면서 중국 성장세 둔화 흐름도 뚜렷한 모습이다.

소매판매 증가율이 3월중 20개월 만에 마이너스(-3.5%)를 기록하고, 4월 들어서도 악화(-11.1%)되는 등 소비 부문이 부진했다. 4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모두 지난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4월 수출증가율도 3.9%(전년 동기 대비)로 전월(14.7%) 대비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 부문 또한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성장세 둔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지준율을 인하(0.25%포인트, 4월 14일)하는 동시에 방역 대응 및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조치도 발표했다. 생필품 공급 및 유통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소비촉진 조치(4월 20일)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조치(4월 26일) 등 내수 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제기구 등 주요 기관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 정부 성장률 목표(5.5% 내외)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은 "중국 정치 상황, 의료역량 및 미·중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제로코로나 정책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하방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봉쇄조치가 해제된다 해도 생산·물류 등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비는 고용시장 악화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더딘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전기車 보험료 매년 급증… 평균 95만원 육박

금감원 일반차 비해 18만원 이상 높아
향후 다양한 특약상품 개발 유도 예정

〈전기차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기차	70.1	70	82.6	94.3
비전기차	68.5	68.2	72.5	76.2

단위 : 만원 /금융감독원

전기차의 보험료가 일반차량보다 연 18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2018년 대비 34.5%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비전기차(내연기관·하이브리드 차량)의 평균 보험료(76만2000원)에 비해 18만1000원 높은 수준으로 전기차 차량가액이 비전기차보다 높아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긴 주행거리도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 중 연 1만5000㎞ 이상을 주행한 전기차 비중은 24.2%에 달했다. 이는 일반 차량(10.3%)보다 2.3배 높았다.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마일리지 특약은 연 1만5000㎞ 이하 주행 시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1만5000㎞ 이상 주행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료 인하요인이 사라진다.

지난해 전기차의 사고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1%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전기차에 비해 2.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연비가 유리한 전기차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비전기차보다 긴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자차담보 평균수리비는 245만원으로 비전기차보다 30.2% 비쌌다. 전기차 핵심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의 높은 교체비용과 전자제어장치·센서 등 전자장치에 대한 높은 수리비 때문이란 설명이다. 특히 고전압 배터리의 경우 전문 정비업체 부족으로 부분수리가 곤란하고, 제작사의 교환정책 등으로 경미한 손상에도 전부 교체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기차의 손해율은 가입대수 증가와 사고율 감소, 평균보험료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 76.0%로 2018년 대비 21.4%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비전기차와 비교하면 2%p가량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특성과 손해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기차만의 고유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4000대로 2018년(4만6000대)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또 전기차 관련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업계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진단과 수리·교환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를 교환·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해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가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특약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는 각 특약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융위, '中企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유동성 위기 대응 … 연말까지 운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 2020년말 2.9%에서 올 3월말 3.6%로 인상됐다. 또 환율은 2020년말 달러당 1088원에서 지난달 말 1248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블룸버그 원자재가격지수도 78.0에서 131.3으로 치솟았다.

이번 조치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266개 중소기업을 포함해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해진 중소기업에게는 채권기관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해 효과적인 지원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금리를 1~2%포인트(p) 감면하는 등 지원을 제공해 왔다. 최근 5년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